

“재개발 난립속 노후주택 방치 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세워야”

류규하 시의원 지적

대구시의 도심 활성화 정책이 곁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시의회 류규하 의원은 27일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대구시의 도심활성화 정책이 종합적인 연구 없이 단위 사업으로만 추진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대구의 도심인 중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상권이 위축되면서 빈 점포와 노후된 주택이 방치되는 등 도심 쇠퇴 문제가 대구시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976년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이후 11개의 도심재개발사업지구가 지정됐지만 30년이 넘도록 사업이 완료된 것은 고작 5개 지구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주변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이나 도시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건축물 개선에만 국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향촌 1지구의 대보백화점과 2지구의 무궁화백화점, 남일지구의 미도백화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도심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과 광주, 전주 등의 예를 들면서 도심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금까지 도심활성화 정책이 부진했고 시행된 사업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디자인위원회와 별도로 도시재생팀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욱기자 choi@idaegu.co.kr